



넥서스 리서치 2026_99 · NR-2026-099

위험등급을 매기는 것은 파는 쪽이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의 결정 주체와 근거 규범을 법령·자율규제 원문에서 확인한 기록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같은 투자성 상품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위험등급이 붙는다. 판매 화면과 설명서 첫 장에 이 숫자가 나온다. 등급을 정하는 것은 감독기관이 아니라 상품을 파는 회사이다. 법률이 그렇게 적어 두었다.

등급을 어떤 구간으로 나누는지 적은 표는 법령 본문에 없다. 고려할 사항 일곱 가지와 "최소 6단계 이상"이라는 칸 수만 밖으로 나와 있다. 나머지는 회사가 정하는 별표 안에 있다. 같은 상품이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여러 등급에 놓일 수 있다.

연구소는 구간표를 고시 본문에 올리는 것이 가장 짧은 길이라고 본다. 회사가 등급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의 폭도 숫자로 정해야 한다. 등급을 매기는 주체를 바꾸는 일은 법률을 고쳐야 해서 훨씬 오래 걸린다.

발행일

2026년 9월 26일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분량

PDF 19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금융상품에 붙은 위험등급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매기고, 그 등급은 무엇을 막아 주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등급을 매기는 쪽은 상품을 파는 회사이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면서 환위험을 덮지 않은 상품 하나를 놓고 봤다. 공표된 기준만 따라도 여섯 칸 가운데 세 칸에 놓일 수 있다. 전체 칸의 절반이다. 같은 상품을 EU 기준에 넣으면 일곱 칸 가운데 한 칸으로 정해진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등급 숫자와 함께 그 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판매 창구에 물어본다.

이 보고서를 관통하는 숫자

3칸. 공표된 기준만 따라도 같은 상품이 놓일 수 있는 등급 칸의 수이다. 전체 여섯 칸의 절반이고, 2026년 9월 기준이다.

차례

1장	위험등급은 판매회사가 정하고 소비자는 숫자를 받는다등급을 매기는 쪽과 파는 쪽이 같다	3
2장	여섯 단계의 공통 틀 안에서도 구간은 회사마다 남는다구간표는 법령 본문에 오른 적이 없다	5
3장	법률·시행령·고시·자율규제가 결정권을 나눠 가진다법률이 등급 결정권을 판매자에게 맡겼다	7
4장	같은 등급도 권유와 비권유 판매에서 작동 방식이 다르다묻는 것도 넘어가는 절차도 갈래마다 다르다	11
5장	산정 근거와 판매 결과를 잇는 통계가 비어 있다등급의 근거는 회사 안에 남아 있다	13
6장	구간표 공개와 독립 검증은 법률 개정 전에도 가능하다구간표를 고시로 올리는 길이 가장 짧다	15
부록 가	용어 풀이	17

1장 · 위험등급은 판매회사가 정하고 소비자는 숫자를 받는다

등급을 매기는 쪽과 파는 쪽이 같다

24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실린 조문의 수 2026년 9월 확인 · 금융투자협회	1개 그 가운데 위험등급 산정을 정한 조문의 수 2026년 9월 확인 · 금융투자협회	7가지 등급을 매길 때 고려하라고 적힌 사항의 수 2026년 9월 확인 · 시행령과 표준투자권유준칙
--	--	---

펀드에 가입하거나 파생결합증권을 사려고 하면 상품 이름 옆에 등급 숫자가 붙어 있다. 1등급은 가장 위험하다는 뜻이고 6등급은 가장 덜 위험하다는 뜻이다. 이 숫자를 보고 사는 사람은 많다. 이 숫자를 누가 정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답은 법률 본문에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투자성 상품을 팔 때 설명해야 할 사항을 넷으로 정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위험등급이다. 그런데 그 조문은 위험등급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이라고 적었다.¹ 상품을 직접 파는 회사가 등급을 정한다는 뜻이다.

등급은 못 사게 막는 장치가 아니라 설명해야 할 항목이다

법률이 위험등급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면 이 등급이 무엇을 막아 주는지가 드러난다. 위험등급은 설명의무 조항 안에 있다. 판매자가 설명해야 할 항목의 하나이다. 몇 등급이면 누구에게 팔 수 없다는 규정은 법률에 없다.

못 팔게 하는 쪽에 가까운 규정은 따로 있다.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이다. 적합성 원칙은 회사가 권유를 할 때 걸린다. 회사는 소비자의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을 묻고,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하지 못한다.² 그래도 소비자가 스스로 사겠다고 하면 판매는 이루어진다.

적정성 원칙은 권유 없이 파는 자리에 걸린다. 회사는 정보를 묻고, 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을 받은 뒤 판다.³ 두 원칙 모두 판매를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절차를 더하는 장치이다.

등급을 매기는 쪽과 그
등급으로 팔 수 있는 상대가
정해지는 쪽이 같은 회사이다.

투자성 상품

원금이 깎일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세 가지를 차례로 묻다

첫째, 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다. 둘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어느 층위의 규범에 적혀 있는지를 본다. 법률인지 시행령인지 고시인지 행정지도인지 자율규제인지에 따라 바뀌는 속도와 밖에서 볼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 셋째, 그 등급이 실제로 무엇을 막아 주는지를 소비자 갈래별로 나눠 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상품을 고르기 전에 위험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간이투자설명서 첫 장의 위험등급 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는 이 위험등급이 붙지 않는다.

2장 · 여섯 단계의 공통 틀 안에서도 구간은 회사마다 남는다

구간표는 법령 본문에 오른 적이 없다

15년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부터
전문개정까지 지난 기간

2009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기준 ·
금융투자협회

42칸

EU 규정 본문에 실린 위험 조합표의
칸 수

2026년 9월 확인 · EU 위임규정
2017/653

100배

EU 시장위험 구간에서 가장 넓은
칸과 가장 좁은 칸의 폭 차이

2026년 9월 확인 · EU 위임규정
2017/653

이 장에서는 확인한 사실만 쓴다. 등급을 정하는 규칙이 지난 열다섯 해 동안 어느 층위에 있었는지, 그 규칙이 무엇을 밖으로 내놓았는지를 본다.

비교축 · 시계열

등급 규칙이 바뀐 시점 일곱 개를 골랐다. 고른 기준은 등급을 정하는 근거 규범의 층위가 바뀐 때이다. 마지막 줄은 같은 기간에 EU가 무엇을 했는지 견주려고 넣었다.

규범의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밖에서 보기 어렵다.

<표 1> 등급을 정하는 근거가 어느 층위에 있었는지 시점별로 정리한 표

한국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 2009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 EU는 대조용 한 줄

시점	무슨 일이 있었나	등급을 정하는 근거의 층위
2009년 2월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위험도 분류를 준칙에 맡겼다	법률 + 자율규제
2016년 7월	펀드 위험등급을 5단계에서 6단계로 나눴다	자율규제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조문이 삭제됐다	법률이 바뀌었다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위험등급이 법률상 설명사항이 됐다	법률 + 시행령 + 고시
2023년 1월	금융위원회가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냈다	행정지도
2026년 4월	표준투자권유준칙 전문개정. 위험등급 산정 조문이 새로 들어갔다	자율규제
2018년 1월	대조 · EU가 요약위험지표를 적용했다. 산정표가 규정 본문에 실렸다	EU 위임규정

주: 1) 마지막 줄은 한국 시계열이 아니라 같은 기간의 해외 대조다.

2) 2016년 개편의 등급별 변동성 구간 수치는 두 번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실지 않았다.

자료: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조항과 개정 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EUR-Lex 규정 본문에서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표가 보여 주는 것은 층위의 이동이다. 적합성 원칙의 근거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겨 갔고, 둘 다 법률이다.⁴ 그동안 구간표는 한 번도 법령 본문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고려할 사항 넷이고 구간이 아니다.⁵

2023년 1월 금융위원회는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냈다. 법이 빠 둔 일부를 뺀 모든 투자성 상품에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매기라는 내용이다. 환율위험이 있으면 1~2등급 올릴 수 있다는 조정 폭도 여기 적혀 있다.⁶ 이 문서의 층위는 행정지도이고 법령이 아니다.

2026년 4월 준칙에 위험등급 산정 조문이 새로 들어갔다. 그 조문은 회사가 법령 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등급을 산정한다고 적었다.⁷ 준칙의 층위인 자율규제가 행정지도를 참고 대상으로 받았다.

EU는 같은 표를 규정 본문에 실었다

유럽연합은 2018년 1월부터 요약위험지표를 쓴다.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이고, 숫자가 클수록 위험이 커서 한국과 방향이 반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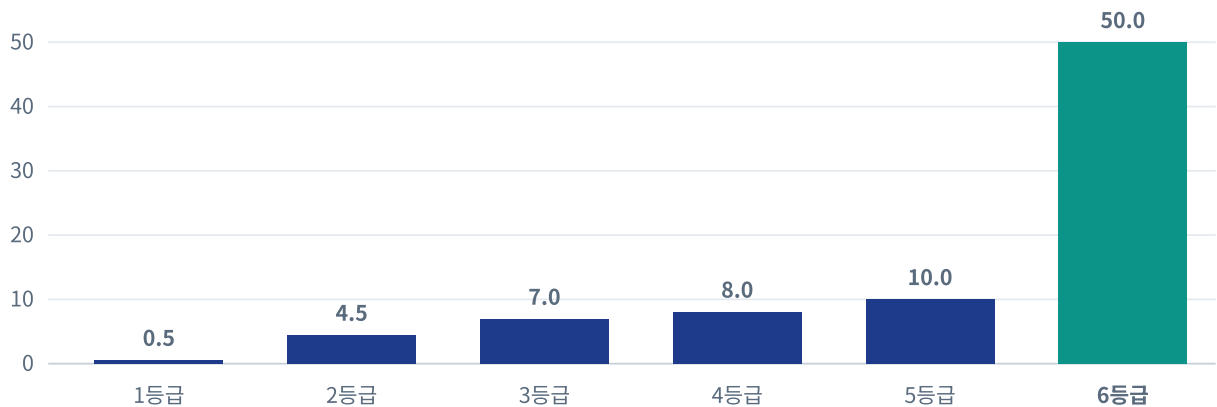
계산 방법은 위임규정 부속서에 통째로 실려 있다. 시장위험을 일곱 구간으로 나눈 변동성 값과 신용위험 여섯 단계가 규정 본문에 있다. 둘을 맞춰 최종 등급을 정하는 마흔두 칸 조합표도 같은 곳에 있다.⁸ 상품을 만든 쪽이 등급을 스스로 올릴 수 있게 한 조항은 부속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⁹

가장 좁은 칸은 0.5%p이고 달한 구간 가운데 가장 넓은 칸은 50.0%p이다. 100배 차이이다. 구간의 폭이 고르지 않다는 점은 EU 제도의 약한 곳이다. 그래도 그 폭이 규정 본문에 적혀 있어서 누구든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등급을 얻다.

[그림 1] EU 시장위험 등급의 구간 폭은 칸마다 크게 다르다

EU 요약위험지표 시장위험 등급별 변동성 구간의 폭 · 2018년 1월 적용본

(단위: %p)



주: 7등급은 위가 열린 구간이어서 폭을 내지 않았다. 세로축은 0에서 시작한다.

자료: EUR-Lex,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653 부속서 II.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설명서에서 위험등급을 매긴 근거가 회사 내부기준인지 협회 기준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간이투자설명서의 위험등급 산정 근거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국내에서 파는 상품에 EU 요약위험지표가 붙어 있지 않다면 두 숫자를 맞대 볼 일이 없다.

3장 · 법률·시행령·고시·자율규제가 결정권을 나눠 가진다

법률이 등급 결정권을 판매자에게 맡겼다

4곳 공표된 기준이 회사에 등급 조정을 허용한 자리의 수 2026년 9월 확인 · 연구소가 원문을 직접 셈	1곳 그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숫자로 공표된 자리의 수 2026년 9월 확인 · 연구소가 원문을 직접 셈	13건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딸린 별표와 서식의 수 2026년 9월 확인 · 금융투자협회
--	---	--

등급은 판매 범위를 정한다. 회사는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몇 단계로 나누고, 성향 단계마다 권유할 수 있는 상품 등급을 미리 정해 둔다. 한 증권사는 위험중립형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 위험등급을 4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표에 표시해 두었다.¹⁰ 상품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가면 권유할 수 있는 상대가 늘어난다.

그래서 등급을 매기는 일은 상품의 위험을 재는 일인 동시에 판매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법률은 이 일을 상품을 직접 파는 회사에 맡겼다. 등급을 매기는 회사와 그 등급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는 회사가 같다. 연구소는 이 구조를 이 보고서의 출발점으로 본다.

등급을 낮추면 권유할 수 있는 상대가 늘어난다. 그 등급을 매기는 쪽이 파는 쪽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고시다.
2026년 4월 2일 시행본
제12조와 별표 3을 직접 확인해
법률·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위험등급 설명 항목을 대조했다.

규칙은 등급을 문턱이 아니라 절차의 한 칸으로 만들었다

적합성 원칙이 걸리면 회사는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사겠다고 해도 권유는 막힌다.¹¹ 그러나 판매 자체는 막히지 않는다. 회사가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이를 이상 숙려기간을 두면 판다.¹² 적정성 원칙이 걸리는 자리도 같다.

규칙이 이 결과를 막았는지 만들었는지를 묻는다면 만든 쪽에 가깝다. 등급을 설명사항으로 정하면 등급은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 항목이 된다. 등급을 판매 금지 기준으로 삼았다면 등급 산정 기준을 회사에 맡길 수 없었다.

손질은 되풀이됐지만 구간표는 법령 밖에 남았다

2009년에 만들어진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위험등급을 회사가 정하도록 하고 분류 예시를 붙였다. 2020년에 자본시장연구원은 증권사 일곱 곳과 은행 네 곳, 모두 열한 곳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을 살폈다. 이 회사들이 2010년 8월

준칙 개정으로 이미 삭제된 유형별 분류 예시를 준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¹³

2016년에는 펀드 위험등급이 5단계에서 6단계로 바뀌었다.¹⁴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가 통일 가이드라인을 냈다. 통일 기준을 따로 낸다는 것은 그때까지 회사마다 산정 방식이 달랐다는 뜻이다. 2024년에는 준칙에 위험등급 산정 조문이 새로 들어갔다. 손질할 때마다 구간표는 법령 밖에 남았다.

지금은 여섯 층이 겹친 규칙이 적용된다

등급을 정하는 규칙은 한 곳에 있지 않는다. 법률이 등급을 설명사항으로 정하고 결정 주체를 판매회사로 지정한다. 시행령이 고려할 사항 넷을 이름 들어 적고 나머지는 고시에 맡긴다. 고시가 그 자리를 받는다.¹⁵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체계와 환율위험 조정 폭을 정한다. 자율규제인 준칙은 그것을 참고 대상으로 받고,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라며 고려사항 일곱 가지를 적어 둔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별표에 구체적인 구간을 적는다.

다섯째 층까지는 누구나 같은 문서를 볼 수 있다. 여섯째 층은 회사마다 다르다. 한 증권사는 등급별 손실가능금액 구간을 안내 화면에 숫자로 올려 두었다. 다른 증권사 화면에서는 구간을 확인하지 못했다.¹⁶ 또 다른 증권사는 등급 분류를 회사 시행세칙의 별도 조문으로 두고 있다.¹⁷ 무엇을 밖에 내놓을지가 회사 선택에 달려 있고, 등급이 실제로 갈리는 자리가 이 층이다.

깊이 보기 · 가

EU는 같은 일을 규정 본문 안에서 끝낸다

앞에서 본 마흔두 칸 조합표를 하나씩 세어 보면 최종 등급이 시장위험 등급과 달라지는 칸이 열다섯이다. 신용위험이 나쁘면 시장위험이 낮아도 등급이 올라간다. 어느 칸에서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규정 본문에 숫자로 적혀 있다.

재구성 값

같은 상품이 규정을 어기지 않고 놓일 수 있는 등급 칸을 센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면서 환위험을 덮지 않은 투자성 상품 하나를 놓고 썼다. 공표된 기준 문장에 그대로 적힌 조정 폭을 넣어, 이 상품이 몇 개 등급에 놓일 수 있는지를 센 것이다. 같은 상품을 EU 기준에 넣으면 몇 칸에 놓이는지도 함께 썼다. 두 값은 각 제도가 공표한 문장에서만 나온 값이다.

계산식

한국 · 후보 칸 3 ÷ 전체 칸 6 = 50.0%

EU · 후보 칸 1 ÷ 전체 칸 7 = 14.3%

차이 = 35.7%p

한국의 후보 칸 3은 기본등급, 한 단계 올린 등급, 두 단계 올린 등급을 센 것이다. 기본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만으로 매긴 등급이다. 환율위험이 있으면 1~2등급 올릴 수 있다고 공표돼 있어서 후보가 셋이 된다. EU의 후보 칸 1은 시장위험 등급과 신용위험 등급이 정해지면 조합표가 한 칸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단위: 등급, 칸)

원자료

입력값	값	근거 규범의 층위	자료 등급
환율위험이 있을 때 올릴 수 있는 폭	1~2등급	행정지도	1차
한국의 등급 칸 수	6칸 이상	자율규제	1차
EU의 등급 칸 수	7칸	EU 위임규정	1차
EU의 최종 등급 결정 방식	42칸 조합표가 한 칸을 지정	EU 위임규정	1차

주: 입력값은 모두 공표된 원문 문장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회사가 정한 별표는 입력값에 넣지 않았다. 준칙이 "최소 6단계 이상"이라고만 적었으므로 한국의 전체 칸 수는 가장 적은 여섯으로 놓고 썼다.

자료: 금융위원회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EUR-Lex 규정 본문.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이 값이 아닌 것

이 값은 어떤 상품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잴 값이 아니다. 어느 회사가 매긴 등급이 틀렸다는 뜻도 아니고, 어느 나라 제도가 더 낫다는 평가도 아니다. 공표된 조정 폭을 넣어, 같은 상품이 규정을 어기지 않고 놓일 수 있는 등급 칸을 센 값이다. 어떤 상품을 권하거나 물리치는 값이 아니며 투자 판단에 쓰는 값도 아니다.

<표 2> 공표된 기준이 회사에 등급 조정을 허용한 자리는 넷이다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 2026년 9월 기준 공표 원문

어디에 적혀 있나	무엇을 허용했나	폭이 숫자로 공표됐나
가이드라인 · 행정지도	환율위험이 있으면 1~2등급 올릴 수 있다	공표됐다
준칙 · 자율규제	외부기관이 만든 위험도 평가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공표되지 않았다
준칙 · 자율규제	여러 자산에 나눠 담은 상품은 가중평균이나 회사 전문조직의 결정으로 정한다	공표되지 않았다
준칙 · 자율규제	위험회피 목적이거나 적립식이면 완화된 기준을 쓸 수 있다	공표되지 않았다

주: 연구소가 공표 원문을 하나씩 세어 정리했다. 회사 별표와 내부기준은 세는 범위에 넣지 않았다.

자료: 금융위원회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넷 가운데 폭이 숫자로 공표된 것은 하나이다.¹⁸ 나머지 셋은 회사 별표와 내부기준 안에 있어 밖에서는 셀 수 없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위험등급과 함께 그 등급을 매긴 근거 문서의 이름을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판매 창구, 상품 설명서의 위험등급 산정 근거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이미 계약한 상품의 등급은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4장 · 같은 등급도 권유와 비권유 판매에서 작동 방식이 다르다

묻는 것도 넘어가는 절차도 갈래마다 다르다

4갈래 같은 상품을 살 때 절차가 갈리는 소비자 구분의 수 2026년 9월 확인 · 연구소가 법령과 준칙에서 직접 셈	3갈래 시행령이 이름 들어 적은 적정성 대상 투자성 상품의 갈래 수 2026년 9월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6종 신규·고령 소비자에게 적합성보고서를 건네야 하는 상품의 수 2026년 9월 확인 · 금융투자협회
--	---	---

같은 상품을 같은 날 사더라도 사람에 따라 밟는 절차가 다르다. 이 장은 권유를 받는지, 전문 소비자인지, 나이가 65세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네 갈래로 나눠 값을 나란히 낸다.

절차의 무게를 가르는 것은 상품의 등급이 아니라 소비자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이다.

집단 구분

네 갈래로 나눠 무엇을 묻고 무엇으로 넘어가는지를 나란히 놓다

<표 3> 같은 상품을 사는 자리에서 갈래별로 걸리는 절차

구분	권유를 받는 일반 소비자	권유 없이 스스로 사는 일반 소비자	전문 소비자	65세 이상 소비자
무엇을 묻나	거래 목적과 재산 상황과 투자 경험을 묻는다	적정성 대상 상품이면 묻는다. 그 밖의 상품이면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전문 소비자이지만 확인한다	왼쪽 첫 칸과 같은 것을 묻고 회사가 따로 만든 기준을 더 적용한다
못 사게 하나	못 사게 하지 않는다. 권유만 막힌다	못 사게 하지 않는다. 부적정 사실을 알린다	아니다. 두 원칙이 걸리지 않는다	못 사게 하지 않는다
정보를 안 주면	권유를 받지 못한다	적정성 대상 상품이면 거래가 제한된다	해당 없다	왼쪽 첫 칸과 같다
서명으로 넘어가나	부적합해도 녹취와 이틀 이상 숙려기간을 두면 판다	부적정 사실을 알리고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받으면 판다	넘어갈 절차가 없다	부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녹취와 이틀 이상 숙려기간을 둔다
잣대는 누가 정하나	회사가 정한 별표의 적합성 판단 기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쓴다	없다	왼쪽 첫 칸의 기준에 회사가 만든 강화된 기준을 더한다

주: 1) 시행령이 이를 들어 적은 적정성 대상 상품은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조건부 자본증권, 고난도 상품 세 갈래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비슷한 상품이 더 붙는다.¹⁹⁾
2) 이틀은 2영업일을 말한다.

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

이 절차의 이익이 가장 큰 사람은 상품 구조를 스스로 뜯어보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 절차가 가장 두껍게 걸리는 자리는 권유를 받는 자리와 65세 이상이다. 온라인 화면에서 스스로 찾아 사는 사람에게는 적정성 대상 상품이 아니면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보호가 필요한 정도와 절차가 걸리는 정도가 어긋나는 자리가 여기이다.

같은 1등급 상품을 사더라도 권유를 받으면 성향을 묻고, 스스로 찾아가면 상품 갈래에 따라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신규 소비자와 고령 소비자에게는 절차가 한 겹 더 붙는다. 회사는 추가연계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을 묶은 여섯 종류를 팔 때 적합성보고서를 건넨다.²⁰ 65세 이상에게 팔 때는 부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녹취와 이틀 이상 숙려기간이 걸린다.²¹

전문 소비자로 분류되면 두 원칙이 통째로 빠진다. 다만 전문 소비자는 서면으로 요청해 일반 소비자로 돌아올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²²

정보를 주지 않으면 갈래가 또 갈린다. 정보를 주지 않은 사람은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소비자로 넘어간다. 적정성 대상 상품이라면 거래 자체가 제한된다.²³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상품만 바뀌어도 걸리는 절차가 달라진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자기가 권유를 받는 자리인지 스스로 찾아 사는 자리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계약 전 받는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투자권유 희망 여부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전문 소비자로 분류된 적이 없다면 일반 소비자 전환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5장 · 산정 근거와 판매 결과를 잇는 통계가 비어 있다

등급의 근거는 회사 안에 남아 있다

56,275건 2024년 상반기에 접수된 금융민원 건수 2024년 상반기 기준 · 금융감독원	16.0% 전년 같은 기간에 건준 금융민원 증가율 2024년 상반기 기준 · 금융감독원	156건 같은 기간 금융투자 권역에서 줄어든 민원 건수 2024년 상반기 기준 · 금융감독원
--	---	--

위험등급 제도가 무엇을 막았는지를 숫자로 재려면 두 가지를 세야 한다. 등급 때문에 팔리지 않은 건수와, 등급이 달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분쟁 건수이다. 공표된 자료에서 두 집계를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자료가 금융민원 통계이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을 56,275건으로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69건 늘어 16.0% 증가이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5,594건 늘고 금융투자가 156건 줄었다.²⁴ 2023년 한 해로 넓히면 금융민원은 93,842건이고 그 가운데 분쟁민원이 35,595건이다.²⁵

이 숫자로만 등급이 무엇을 막았는지 알 수 없다. 민원을 유형별로 나눈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권역 민원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등급 제도가 작동했다고 말할 수 없다. 민원은 상품 종류와 판매 경로와 시장 상황이 함께 움직이는 값이다.

밖에서 볼 수 없는 자리가 넷 남다

첫째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등급으로 바꾸는 구간표이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세부 산식은 공식 첨부 문서에서 확인했다.²⁶ 다만 회사가 실제 적용한 입력값과 조정 사유가 상품별로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입력값을 넣어 같은 등급이 나오는지 밖에서 재현하기 어렵다.

둘째는 회사가 정한 별표이다. 준칙은 적합성 판단 기준과 위험도 분류 기준을 회사가 별표로 정하라고 적었다. 별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가 이 별표를 밖에 올릴 의무는 지금 규정에 없다.

셋째는 같은 상품에 회사마다 다른 등급이 붙은 사례를 모은 집계이다. 그런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회사별 등급 차이를 밖에서 견줄 방법이 지금은 없다.

넷째는 회사가 부적합하다고 보고도 판 건수이다. 녹취와 숙려기간을 거쳐 판매한 건수를 공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²⁷ 절차가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알 수 없다. 절차가 드물게 쓰인다면 등급이 실제로 걸려 낸다는 뜻이고, 자주 쓰인다면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등급이 무엇을 막았는지를
밖에서 셀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상품을 사기 전에 위험등급 산정 근거를 적은 서류를 달라고 말한다.

확인하는 곳 · 판매회사 고객센터, 상품 설명서의 위험등급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회사가 별표 원문을 주지 않아도 규정 위반은 아니다. 공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6장 · 구간표 공개와 독립 검증은 법률 개정 전에도 가능하다

구간표를 고시로 올리는 길이 가장 짧다

이 장은 대안 다섯 갈래를 견주고 주어별로 할 일을 나눈다. 어떤 상품을 사라거나 사지 말라는 말은 넣지 않는다. 대안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을 바꾸느냐가 아니라 어느 층위의 규범을 고쳐야 하느냐이다.

<표 4> 대안 비교 · 어느 층위를 고치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대안별 주체 · 근거 규범의 층위 · 고치는 절차

대안	누가 한다	근거 규범의 층위	고치는 절차	해결되는 것 / 남는 것
가. 구간표를 고시 본문에 실는다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위원회 고시 개정	같은 입력값에 같은 등급이 나온다 / 회사 별표는 그대로 남는다
나. 등급을 매기는 주체를 바꾼다	국회	법률	국회 법률 개정	파는 쪽이 매기는 구조가 바뀐다 / 산정기관을 새로 세워야 한다
다. 회사가 정한 별표를 공시하게 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협회 규정 개정	등급의 근거가 밖에서 보인다 / 등급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라. 조정 폭을 정해진 값으로 고정한다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위원회 고시 개정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 나머지 세 자리는 남는다
마. 등급 칸 수와 숫자 방향을 통일한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협회 규정 개정	같은 숫자가 같은 위험을 가리킨다 / 상품 갈래별 예외가 남는다

주: 층위가 낮을수록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다섯 갈래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쓸 수 있다.

자료: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정리.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가는 가장 짧은 길이다. 구간 수치는 지금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의 첨부 문서에 있다. 법률과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도 금융위원회가 고시를 바꾸면 같은 입력값에 같은 등급이 나온다.

나는 상품을 만든 쪽이나 제3의 산정기관이 등급을 정하도록 법률 조문을 바꾸는 길이다. 파는 쪽이 매기는 구조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지만 국회를 거쳐야 한다. 다섯 갈래 가운데 가장 오래 걸린다.

다는 회사가 정한 별표를 공시 대상으로 삼는 길이다. 적합성 판단 기준과 위험도 분류 기준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올린다. 자율규제인 협회 규정으로 시작할 수 있고, 공시 항목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고시가 받쳐 준다.

구간표를 고시 본문에 실는 일은 법률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라는 환율위험이 있으면 1~2등급 올릴 수 있다는 문장을 하나의 값으로 바꾼다. 넷 가운데 공표된 한 자리를 좁히는 길이다.

마는 등급 칸 수와 숫자 방향을 통일하는 길이다. 준칙이 최소 6단계 이상이라고만 적어서, 회사가 일곱 단계를 쓰면 같은 숫자가 다른 위험을 가리킨다.

읽는 사람이 할 일

오늘 할 수 있는 것

1 위험등급과 함께 그 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한다.

확인하는 곳 · 판매 창구, 온라인 판매 화면의 설명서

2 권유를 받지 않고 사는 자리라면 적정성 대상 상품인지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온라인 판매 화면의 투자권유 희망 여부 선택란

3 투자자 정보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계약 전에 다시 작성한다.

확인하는 곳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작성일자과 유효기간 안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거래한다면 이 절차는 걸리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할 일

회사는 위험등급을 매긴 기준과 그 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설명서에 적는다. 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을 함께 설명하는 일은 준칙이 이미 정해 뒀다.²⁸ 별표의 구간을 밖에서 볼 수 있게 올리는 일은 회사가 먼저 할 수 있다.

당국이 할 일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첨부 구간표를 고시 본문으로 옮긴다. 금융투자협회는 최소 6단계 이상이라는 문장을 여섯 단계로 고정하고, 회사 별표를 공시 항목에 넣는 개정도 검토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표준투자권유준칙은 2025년 9월과 2026년 4월에 개정됐다. 2026년 4월 9일 현행 제16조를 직접 대조한 결과 최소 6단계, 1등급 최고위험, 회사의 산정 책임이 유지돼 있다.²⁹ 이후 개정 여부는 협회 법규정보시스템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투자성 상품

원금이 깎일 수 있는 금융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이 들어간다.

위험등급

투자성 상품에 붙이는 위험의 크기 표시. 한국은 1등급이 가장 위험하고 숫자가 커질수록 덜 위험하다.

적합성 원칙

회사가 권유를 할 때 소비자의 목적·재산·경험을 묻고, 맞지 않는 계약은 권유하지 못하게 한 규칙.

적정성 원칙

권유 없이 파는 자리에서도 정보를 묻고,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게 한 규칙.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

국가·한국은행·금융회사·주권상장법인 등이 전문금융소비자이고 나머지가 일반금융소비자다. 이 보고서는 일반 소비자, 전문 소비자로 줄여 썼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협회가 만든 자율규제 규정.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때 밝을 절차와 위험등급 산정 방법의 뼈대를 담고 있다.

행정지도

법령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내는 안내·권고. 가이드라인이 여기 들어간다. 법령보다 빨리 바뀌고 그만큼 쉽게 되돌아간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폭이 큰 상품으로 규정이 따로 묶어 둔 갈래. 권유가 없어도 정보를 묻는 대상이다.

적합성보고서

회사가 왜 이 상품이 이 소비자에게 맞는다고 보았는지를 적어 건네는 서류. 신규·고령 소비자에게 여섯 종류 상품을 팔 때 쓴다.

요약위험지표

EU가 쓰는 위험 표시.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이고 숫자가 클수록 위험이 크다. 한국과 방향이 반대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제19조, 시행 2026.1.2. 현행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47>)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3조, 시행 2026.4.28. 현행 시행령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66787>)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1차]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제12조·별표 3, 시행 2026.4.2. 현행 감독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6850>)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1차] 금융위원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2023년 1월 25일. 보도자료와 공식 첨부 (<https://www.fsc.go.kr/po010101/79327>)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1차]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제16조, 2026년 4월 9일 개정본. 현행 제16조 (<https://law.kofia.or.kr/service/law/detailArticlePrint.do?contentSeq=305503&historySeq=1787&seq=149>)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1차]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제14조, 2026년 4월 9일 개정본. 현행 제14조 (<https://law.kofia.or.kr/service/law/detailArticlePrint.do?contentSeq=305500&historySeq=1787&seq=149>)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1차] EUR-Lex,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653, Annex II-III. EU 원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7R0653>)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1차] 키움증권, 「고객투자성향등급 분류 기준」. 회사 공시 (<https://www.kiwoom.com/wm/common/commFundRankInfoPop>)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1차] 유안타증권,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안내」. 회사 공시 (https://www.myasset.com/myasset/static/customer/bzInfo/CU_0405000_P1.jsp)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2차]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방향」, 2020년. 연구 원문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0&zcd=002001016&zno=1554&cno=5550)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각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 투자성 상품의 설명사항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을 든다.
-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항.
- 같은 법 제18조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2020년 3월 24일 삭제됐다. 현행본에 삭제 표기가 남아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이름을 들어 적은 고려사항 넷은 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다. 다섯째 호는 이에 준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겼다. 같은 조 제2항은 연계투자자 일부 신탁계약을 위험등급 설명 대상에서 뺐다.
- 금융위원회,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보도자료(2023년 1월 24일). 같은 내용을 전재본 한 곳에서 한 번 더 맞춰 봤다.

7.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16.1)·16.2). 2026년 4월 9일 개정본이다. 고려사항을 일곱으로 적고 최소 6단계 이상으로 나누되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하라고 정했다.
8.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7/653, Annex II Part 1·Part 3.
9. 같은 부속서에서 상품을 만든 쪽이 등급을 스스로 올릴 수 있게 한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찾아본 범위는 Annex II와 Annex III 본문이다.
10. 키움증권 고객투자성향등급 분류 기준 화면. 위험중립형 행에 보통위험(4등급)·낮은위험(5등급)·매우낮은위험(6등급)이 표시돼 있다. 화면은 이 표시를 가입 가능으로 부르는지 권유 가능으로 부르는지 밝히지 않았다. 성향 이름과 구간은 회사마다 다르다.
11. 표준투자권유준칙 10.1)·10.4).
12. 표준투자권유준칙 1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
13.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방향」 (자본시장포커스, 2020년). 2020년 6월 기준 증권사 일곱 곳과 은행 네 곳을 살폈고, 2010년 8월 27일 준칙 개정으로 삭제된 유형별 위험등급 분류 예시를 준용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같은 내용을 서울경제 2020년 10월 5일 보도에서 한 번 더 맞춰 봤다.
14. 비즈워치 2016년 7월 4일 보도. 개편 당시 등급별 변동성 구간 수치는 두 번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해 신지 않았다. 찾아본 범위는 머니투데이방송 2015년 12월 28일 기사, 펀드닥터 2016년 6월 30일 글, KB자산운용 안내 글이다.
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2026년 4월 2일 시행본 제12조와 별표 3을 확인했다. 감독규정은 적합성 평가와 위험등급 설명에서 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다.
16. 회사 별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증권사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97.5% 손실가능금액을 기준으로 여섯 등급의 구간을 안내 화면에 숫자로 올려 두었다. 찾아본 범위는 증권사 세 곳의 공개 안내 화면과 준칙 본문이다.
17. 미래에셋증권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권유시행세칙 제7조. 위험등급을 여섯 단계로 분류하도록 적혀 있고, 선물거래상품은 세 단계로 따로 나눈다는 단서를 두었다.
18. 표준투자권유준칙 10.3)·16.4)·16.5)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네 자리를 연구소가 하나씩 세었다.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셋을 이름 들어 적고, 라목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상품을 더 두었다. 본문의 셋은 이름이 적힌 갈래만 쓴 것이다.
20. 표준투자권유준칙 10.5). 신규투자자·고령투자자·초고령투자자에게 ELS·ELF·ELT·DLS·DLF·DLT 여섯 종류를 팔 때다.
21. 표준투자권유준칙 11.1)·11.2). 11.2)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일부 상품을 대상에서 뺐다.
22. 표준투자권유준칙 5.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단서.
23. 표준투자권유준칙 6.1)·7.2)·8.4).
24. 금융감독원 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을 거쳤다. 권역별 절대 건수와 유형별 내역은 첨부 문서에만 있어 확인하지 못했고, 증감 건수만 썼다.
25.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 KDI 경제정보센터 전재본을 거쳤다. 권역별 내역은 첨부 문서에만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26. 가이드라인의 시장위험·신용위험 구간과 종합등급 산식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공식 첨부 문서에서 확인했다.
27. 부적합하다고 보고도 판 건수는 공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찾아본 범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 동향 두 건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다.
28. 표준투자권유준칙 14. 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그 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하라고 정했다.
29. 표준투자권유준칙 2026년 4월 9일 개정본 제16조를 직접 확인했다. 최소 6단계, 1등급 최고위험, 회사의 산정 책임이 현행본에 유지돼 있다.



제목	위험등급을 매기는 것은 파는 쪽이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99 · NR-2026-099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9월 26일
자료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위험등급을 매기는 것은 파는 쪽이다」, 넥서스 리서치 2026_99(NR-2026-099), 2026.9.26. 영구 링크 · https://nexusfmi.com/research/investment-product-risk-grade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이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투자와 계약 결정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